

광주일보 인터넷 패널 신당·민주당 통합 여론조사

‘이명박 시대’ 지역현안·공약 점검

6 J프로젝트와 F1 대회

“총선전 뭉쳐야 호남 고립 막는다”

통합땀 호남·수도권 아우르는 정치세력 자리잡아

“한나라 맞설 정당 건설해야” 지역민 메시지 담겨

광주일보의 이번 인터넷 패널 여론조사결과는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둘 중 어느 당도 지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음지일 수 없는’ 숫자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호남지역의 정치적 고립과 소외를 막기 위해선 신당과 민주당이 뭉쳐야만 한다’는 지역민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는 신당을 호남의 대표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답변이 69%를 차지,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지난 1월 본보가 광주·전남지역민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신당의 지지율이 31.8%에 불과했다.

민주당의 경우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선 31%로부터 ‘호남 대표 정당’이라는 답변을 얻었지만, 지난 1월 여론조사에선 지지율이 9%에 그쳤다.

오랜 세월 호남인의 대표정당으로 자타가 공인해 온 민주당에 어쩔수 없이 등을 돌리면서도 대선과 총선을 위해 급조된 신당에도 마음을 주지 못하는 지역민의 깊어가는 고민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이번 패널 조사에서 지역 여론주도층 가운데 76%가 신당과 민주당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4·9 총선을 앞두고 양 당이 추구하는 정책방향과 정체성 찾기에 중요한 지점이 될 것으로 지역 정치권에서는 풀이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치 세력이 지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갈린 뒤 대립과 갈등을 반복해 오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에 실패하자 ‘더 이상의 분열은 목과할 수 없다’는 정서가 지역 민심의 밑바닥에서부터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 지역민은 신당과 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에서도 따로 갈 경우, 호남에서는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는 ‘호남 지역당’의 한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물론, 이 같은 민심의 밑바닥에는 ‘현재처럼 분열된 법외권 구도로는 대선에 이어 총선에서도 참패가 불가피하며, 결과적으로 호남의 정치적 고립과 소외를 가져올 수밖에 없

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에서는 “호남정치의 맥을 이어온 민주당의 정통성과, 현실적인 지지 기반을 갖춘 신당의 세(勢)를 묶는다면 그 영향력이 수도권에까지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 섞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양 당이 통합된다면 ‘호남과 수도권을 아우르는’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란 예기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패널 조사 결과는, ‘한나라당에 맞설 대안 정당을 건설하라’는 지역민들의 간절한 메시지”라며 “총선 이전 새로운 호남 정치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손학규 대표 체제로 전환한 대통합민주신당이 지난 11일 당대표 이·취임식을 갖고 새 출발, 이번 주 내 당직 인선을 마치고 총선 체제로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18대 총선에서 사실상 ‘공천 살생부’를 작성할 ‘공천심사특별위원회(이하 공특위)’ 구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합뉴스

간척지 무상공급 등 국가차원 지원 절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호남광역경제권 발전구상’을 제시했다. 광양·여수·순천~무안·목포·영암·해남~새만금을 연계한 ‘호남권대상각 광역경제권’ 개발로 환황해경제시대의 신무역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이다.

전남도가 추진해온 ‘J프로젝트’나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 등을 적극 지원해 전남 서남권을 동북아의 해양·문화·관광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디게 진행 중인 서남권 개발을 이명박 정부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대규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한해 간척지 매립권 무상 양도 ▲내국인 카지노 허용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새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진입도로의 국비예산 반영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J프로젝트 부지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2010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도 ▲F1지원특별법 ▲개발권료의 50% 국가지원 ▲F1경주장 진입도로 개설 등을 국가차원에서 도와줘야 한다.

특히 대회 개최에 따른 국가지원, 각종 개발절차 등을 담고 있는 F1지원특별법의 경우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추진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2월 임시국회가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

당의 서남권개발에 대한 의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첫 무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당선인은 이명박 당선인의 비서실장인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대표 발표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F1특별법 지원에 발목을 잡아왔지만, 이 당선인이 출마차 F1대회에 대한 지원의지를 보여왔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당선자는 F1특별법 조

기제정, 모터스포츠 R&D센터 및 교육기관 건립, F1경기장 진입도로 개설(2.78km), 친환경 자동차 부품 생산 집적화 단지 조성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새만금 태스크포스를 인수위에 두는 등 새만금 개발을 적극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유사한 형태로 먼저 시작한 J프로젝트가 우선 순위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특색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에 따라 기업도시개발

내국인 카지노 허용도 기업도시 개발의 경제성 확보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성사시켜야 할 핵심요건이다. 서해안 및 목포~광양고속도로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하게 23.6km의 진입도로(5천 800억원)도 개설해야 한다.

도는 이에 따라 기업도시개발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연합뉴스

각 계과 배제 ... 외부인사가 위원장 맡을 듯

■ 신당 공천특위 구성 어떻게

손학규 대표 체제로 전환한 대통합민주신당이 이번 주 내에 당직 인선을 마치고 총선 체제로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18대 총선에서 사실상 ‘공천 살생부’를 작성할 ‘공천심사특별위원회(이하 공특위)’ 구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공천 혁명’을 통한 대폭적인 물갈이를 수차례 예고한 바 있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공특위 구성을 둘러싸고 각 계과의 치열한 내부 힘겨루기가 진행될 전망이다.

13일 대통합민주신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신계륜 사무총장 등 일부 당직자 인선을 마친 손학규 대표는 이번 주 내에 최고위원 등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짓고 이르면 다음주부터는 공특위 설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 이달 말께는 공특위를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특위는 최고위원회의의 추천 및 검증의 과

정을 거쳐 이뤄질 전망이다. 인선은 계과 의원들을 철저히 배제하는 등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7개 계과가 복잡하게 얽힌 당 내부 구조를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를 감안하듯 정치권에서는 당내 각 계과를 대표하는 최고위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공특위원 추천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 공특위는 당 내부인사와 외부인사를 각기 절반씩 배분한다는 원칙 아래 15~20명 내외로 구성될 전망이다. 공특위원장은 외부인사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김효석 원내대표는 “공특위 구성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며 위원장은 외부 인사가 맡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당은 다음달 중순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친다는 방침이어서 이달말께 구성된 공특위는 다음달 구정 연휴 직후, 공천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당 내부에서는 공특위가 당·정·청 핵심인사, 그동안 의정생활에서 오만하거나 불성실한 행태를 보인 인사, 당 내에서 정치적 물의를 빚은 인사 등 5개 정도의 기준을 복합적으로 적용, 물갈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손학규 대표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천심사위원회와 기준을 만들어 새로운 정당을 선도해갈 인물들을 공천하겠다”며 “경륜과 해신이 잘 조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손 대표는 이날 “개인적 정파의 이익을 앞세워 해당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해, 계과를 의식하지 않고 과감한 물갈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최소한 현역의원의 30%~40% 이상이 공천 과정에서 물갈이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신당 사무총장 신계륜씨 대변인에 우상호 의원

대통합민주신당은 13일 당 사무총장에 신계륜 전 의원(사진)을, 대변인에 우상호 의원을, 대표 비서실장에는 이기우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신계륜 사무총장은 3선 중진급 의원 중 하나로 386세대의 만형격이다. 14대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협상을 성사시킨 참여정부 개국공신으로 꼽힌다.

우 대변인은 손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열린우리당 최장수 대변인을 역임했고 신당 창당 과정에서 각 계과 간 대변인 역할을 했다.

신계륜 사무총장은 3선 중진급 의원 중 하나로 386세대의 만형격이다. 14대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협상을 성사시킨 참여정부 개국공신으로 꼽힌다.

/임동욱기자 tuim@